

# 콘텐츠@창조산업 동향과 이슈 :

## 정책 동향



### + 콘텐츠산업 주요 정책동향

|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

#### 예술인 복지 대폭 확대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개편 및 지원 확대 방안

정부는 '문화융성' 국정기조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2014년 문화예술 분야부터 본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100억 → 200억) 될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산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에 피해보는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소송 지원을 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정착도 적극 유도한다. 위험한 영화촬영현장에는 응급의료팀을 대기하도록 하고, 관련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부상위험이 높은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재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13년 9월 17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구조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2014년 관련 사업예산도 대폭 확대(문화예술진흥기금 1,223억 원 → 1,875억 원 전년 대비 53% 증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①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일반회계 9개 사업 이관)하고, ② 선별적·소액다건식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③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지원 사업과 지역 창작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부족이 예상되는 문예기금 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회계는 ①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예술복지사업 추가 및 사업 규모 확대 (100억 원 → 200억 원) ② 국립예술단체 지원 내실화 ③ 생활·산업생산환경 내 문화향유 공간 신설 ④ 장애인 예술지원 강화(장애인 창작사업 일반회계로 이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향후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에 있어 ① 예술가 맞춤형 지원 ②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③ 융·복합 예술 지원 ④ 유사·중복 조정 및 간접 지원 방식 확대 ⑤ 지역협력사업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현오석 부총리는 “문화융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 강화한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단편적·선별적인 지원방식보다는 그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예술분야는 예술 수요층을 넓히는 정부노력과 함께 예술가 스스로도 창작 자율성과 민간 활력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문체부-미래부,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방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9월 12일(목), 제137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문체부와 미래부는 콘텐츠산업이 타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통해 창조경제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해외진출 확대방안은 현재 48억 달러 수준의 콘텐츠 수출을 2017년까지 연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수출업계 애로 해소 및 현지 마케팅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활성화 △수출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지원 기반 구축 △호혜적 교류 협력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남미, 중동 등의 신흥 시장 개척 및 아시아지역 교류·협력 확대, 한국 콘텐츠 공동홍보관 운영 확대, 콘텐츠 국제공동제작 및 콘텐츠 펀드를 활용한 글로벌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와 관계 부처·기관 간 해외진출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문화융성위원회 워크숍 개최 및 전문위원회 출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는 9월 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개최해 문화융성 현안 과제들을 발굴한다.



위원회는 다양한 문화 분야의 현안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문화산업, 전통문화, 문화가치확산 등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전문가 35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한다.

문화예술전문위원회는 문화예술 창작역량 제고,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성 배양, 문화예술의 향유 확대와 격차 해소 등을 소관사항으로 하며,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전통문화전문위원회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활용, 전통문화자원의 산업화 및 세계화,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 등을 소관사항으로 하며,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문화산업전문위원회는 한류 지속성장 방안, 문화 융·복합 산업 육성,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마련 등을 소관사항으로 하며, 문화산업 분야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문화가치확산전문위원회는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환경 조성, 문화가 있는 해외순방 및 초청행사 등을 소관사항으로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4개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소관사항과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관련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위원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1차 위원회 회의(7. 25.) 시 논의된 제안사항과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 워크숍 결과, 그리고 지역문화현장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지역의 의견들을 모두 종합하여 오는 10월 위원회 2차 회의 시, 발표할 예정이다.

##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단속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2년 캐릭터 산업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발간)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핵심 창조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산 캐릭터 산업은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7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에 육박하는 2조 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법 복제품의 대부분은 저작권 및 상표권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들이지만, 이 제품들의 위법성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불법 복제품들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캐릭터 불법 복제품들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결합복제(2개 이상의 캐릭터 제품을 결합시켜 만든 제품), 변형복제(정품 캐릭터 제품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만든 제품) 등 그 복제 형태가 다양하여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 캐릭터 상품이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반제품으로 만들어져 국내에 수입된 후 조립, 유통되는데, 수입과정에서 불법 복제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수입차단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부족하여 구매자의 64%가 정품 캐릭터 상품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국산 캐릭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여 불법 캐릭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캐릭터 관련 협회, 캐릭터 저작권자 및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뽀까팀, 뽀로로팀, 로보카 폴리팀 등)을 구성하여 주요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로 순환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 제품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신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인 copy112([www.copy112.or.kr](http://www.copy112.or.kr))나,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신고센터([www.brandpolice.go.kr](http://www.brandpolice.go.kr))에서 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위조 상품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 신고접수처

| 기관                 | 연락처          | 사이트 주소                                                           |
|--------------------|--------------|------------------------------------------------------------------|
|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 1666-4646    | <a href="http://www.brandpolice.go.kr">www.brandpolice.go.kr</a> |
| 한국저작권위원회 불법복제물신고센터 | 02-2669-0074 | <a href="http://www.copy112.or.kr">www.copy112.or.kr</a>         |

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국산 캐릭터 상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해 세관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품 캐릭터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전개,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스\* 활성화, 대형 테마파크 등 유통업체와의 정품 사용 협력 추진 등을 통해 불법복제품 사용 근절 및 정품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회의원 24명 포함 약 3,500여 명의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스 결성(13. 7. 18.)

앞으로도 문체부는 이러한 불법 복제품 유통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청, 관세청 등과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속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